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서비스...신용카드 혜택 '쫄쫄'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의 10%, 10만원 초과는 15%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공제한도가 기본 300만원, 추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두 배(80%)로 상향됐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에 한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공제된다.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고액연봉자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31일 개통한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 행안부, 지방보조금 불이익 2배 상향...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지자체에 불이익을 기존의 2배를 주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결정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재원이 부족한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일종의 지원금이다. 지방정부 중 상당수는 지역 경제상황이 열악해 중앙정부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법령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 내년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이번 교부세 안의 핵심은 재정 감축이다.

### '기회발전특구' 법인·상속·재산 등 100% 감면...감세 규모는 미추청

정부가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주요 세금을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준다.

법인 소득은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2년간 50% 감면, 보유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등 강력한 세금지원으로 꾸렸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를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 계획(2023~2027년)'이 최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동하거나 특구에서 창업 시 패키지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5년간 법인세 100% 감면을 받고 이후 2년간 법인세를 50%를 감면받는다.

특구 내 부동산 취득세는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관련한 소득·법인세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는다.

기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에 감세 혜택을 받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난다.

특구 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10%까지 민영주택 특별 공급을 제공하고, 이밖에 회사 따라 집을 옮겨야 하는 임직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한다.